

대유행은 삶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원인불명의 폐렴은 2020년 2월 11일 코로나19(COVID-19)라는 이름을 얻었고, 세계보건기구는 3월 19일 마침내 전염병 경보단계(1~6단계)의 최고 단계인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전 세계 확진자는 2,700만 명(9월 8일 현재)을 넘고 있다(우리나라는 21,432명).

코로나19는 이번 호 기획특집 유럽사례에서 보듯,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성장의 급락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증과 금융불안정성, 부문별·지역별 불균등 충격에 따른 기업의 도산 및 시장 취약성, 일자리와 가구소득의 손실에 따른 고용가능성의 침식과 빈곤 증가라는 단기적 충격을 가져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경제적 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글로벌 경제봉쇄는 국내외 이동제한 등으로, 지난 8개월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는 다양한 효과(예를 들면, 코로나 블루)를 일으킨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 1분기에 1.3% 역성장하였고, 2분기에는 3.2% 역성장으로 더욱 악화되어 금융위기(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수출 역시 지난 2분기 중 16.1% 감소하여, 1963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충격으로 취업자는 지난 4월 전년동기대비 47.6만 명이나 감소하였고, 그 이후 감소폭은 줄어들었

지만 7월에도 23.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8월 27일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5월)에서 -1.3%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OECD의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치(미국 -7.3%, 일본 -6.0%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유행의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여전히 경제회복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주요국의 거시경제적 대응책,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사회정책, 그리고 대유행에 따른 삶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에 대한 시각을 9, 10, 11월호 세 차례에 걸쳐 신는다. 이번 호는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미국과 유럽의 거시경제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무휴업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례 없는 고용감소와 실업증가에 직면한 미국의 조치는, 기획특집 미국사례에서 보듯,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 제정된 「코로나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정법(CARES법, 이하 ‘안정법’)」으로 요약된다. 이 법에는 급여세제혜택, 급여보호프로그램, 실업급여 연장, 보충실업급여, 단시간보상제도와 일자리나누기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되며, 추가로 유급병가 및 유급가족의료휴가 등을 규정한 「가족우선 코로나 대응법」을 제정하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유행실업부조(PUA)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대유행의 충격을 일부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지만,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실업률이 2021년까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연방지출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다루는 기획특집 유럽사례에서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가 두 자리 역성장할 가능성을 전제하고,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지출의 즉각적 확대에 추가하여 실시한 재정부양책, 통화정책 조치, 경제활동 재개를 목표로 한 조치 등 광범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실시한 재정적자 억제와 공공부채 관리를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의 완화,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국가보

조금) 제한 규제의 적용 중단, 유럽중앙은행의 자산매입프로그램 확대 등을 이야기한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은 경제회복기금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회복책(차세대 유럽연합)을 통해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딜과 디지털 유럽이라는 중기 전략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으로 봉쇄조치의 충격, 특히 실직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일부 달성하였지만, 노동시장의 불가피한 혼란과 경제적 분열에 대처할 새로운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위험 - 부정적 경제적 효과의 장기화, 거시경제정책의 제약, 세계화와 다자주의 국제경제질서의 현저한 후퇴 - 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말 14.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함께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7조 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제침체의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 14일)을 발표한 바 있다.

여전히 대유행은 진행형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조속한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유행의 종식이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지금까지 겪고 있는 위험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대유행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 대응책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위기가 가져올 장기적 변화에 걸맞은 삶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책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KLI**